

아시아 지역의 석유수요구조변화와 정책방향

極 동지역을 포함한 아시아 전체에 있어서 重油의 공급과잉등 에너지 수요구조의 불균형이 확대되고 있다. 에너지 수급문제에서 파생된 이 불균형을 방지한다면 자원 수출국과 수입국간의 긴장관계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적인 기대를 모으고 있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지속적 경제성장 달성에 기초적 조건이기도 한 에너지시장의 균형발전을 위해 관계제국의 궤도수정이 필요하다.

현재와 같은 에너지 공급과잉하에서 中共, 인도네시아, 濠洲, 美国 등은 日本에 대한 수출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中共은 외화획득을 위해 내년 이후의 中·日 장기무역거래 교섭에서 對日 원유수출량을 지금까지의 연 800만톤(약 16만b/d)에서 1천만톤(약 20만b/d)으로 증대할 것을 희망하고 있다.

한편, 아시아 시장에서 中共의 경쟁상대인 인도네시아도 日本의 原油 수입량이 줄어들고 있는데 대해 『일본이 자국의 총수입원유에서 차지하는 인도네시아 원유의 점유율 15%를 지키기로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이를 크게 밀돌고 있다』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濠洲 정부도 『濠洲석탄의 시장점유율 유지는 濠洲에 대한 중요한 약속』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들 자원대국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도 對日 에너지 수출증가를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들에 공통된 점은 對日 무역적자 개선을 위한 것 이라는 논리이다. 에너지시장은 日本으로서 분명히 구매자 시장과 같이 보이지만, 실패는 반드시 그렇지 않다. 에너지 거래가 자유경쟁 시장원리로 이루어지고 수입국이 보다 값싸고 우선도가 높은 것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다. 공급과잉 상태하에서도 공급부족시

와 같이 정치적 색체가 짙게 깔려 있는 것이 현상이다. 이 공급과잉시의 긴장이라고도 할 수 있는 상황을 낳고 있는 요인은 몇가지 있다. 첫째, 韓國, 日本, 台灣 등 東北아시아의 에너지 소비구조가 수요의 저성장, 脫石油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데 반해 자원수출국은 石油·석탄·천연가스 등 모든 면에서 수출증대를 지향하고 있어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다.

소비국측의 구조변화 중에서 가장 뚜렷한 것은 電力, 도시가스, 기초소재 산업 등 대규모 에너지 수요업계에서의 脫石油, 특히 脫重油가 빠른 속도로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전력업계는 原子力, 도시가스업계는 LNG를 선호하고 있다. 石油을 중심으로 해 온 과거의 소비구조에 비하면 훨씬 안정도가 높아졌다는 것은 사실이다. 석유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에너지 수입국의 이러한 방향은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이다. 전력, 도시가스 부문의 연료전환의 결과 이 분야에서의 石油(重油, 나프타)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中共, 인도네시아는 주력수출 원유가 重油수율이 높고, 유황 성분이 적기 때문에, 이른바 전력 전용 유종인 만큼 타격이 크다. 東北아시아 지역에서의 발전소와 같은 대수요처를 상실하고 있는 中共의 大慶유전과 인도네시아의 미나스 原油로 대표되는 「아시아형 원유」는 어느 정도 값싸게 판매하려는 가격정책을 펴고 있지만, 정치적 압력을 수입국에 가하지 않으면 팔기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 아시아 각지에서서의 原油價格 대폭하락은 아시아형 原油의 판매경쟁 격화를 반영하고 있다. 논리적으로 大慶원유 對 미나스 原油의 판매경쟁은 아시아의 각 정유공장에서 重油 생산량 증대를 가져오며, 중유가 발전용 연료로서 石炭, LNG 또는

中東의 주요수출용 정유공장 현황

	정 유 공 장	정제능력(천B/D)	완 공 연 도	출 자 비 율(%)
사우디아라비아	얀 부	250	1984	페트로민(50) 모빌(50)
사우디아라비아	쥬 베 일	250	1985	페트로민(50) 셸(50)
사우디아라비아	라 비 그	325	1986~7	페트로민(50) 페트롤라(그리스)(50)
쿠 웨 이 트	미나 압둘라	150	1986	쿠웨이트 국영 페트롤리엄(50)
리 비 아	라스 라누프	220	1985	리비아 내셔널오일(100)
計		1,195		

〈資料〉 EC 위원회 리포트

原子力과 경쟁할 수 있을 정도까지 가격 수준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重油가격의 충분한 인하는 동시에 아시아 지역에서 歐美에 비해 설비가 뒤지고 있는 重質油 분해설비에 대한 석유산업의 투자를 촉진시킬 것이다. 歐美 석유산업은 상압증류설비에 대한 분해설비의 설치율이 30~40%에 달하고 있으나, 아시아 지역에서의 평균설치율은 아직 10%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한편 사우디 아라비아, 쿠웨이트 등 中東 산유국의 신규 정유공장이 가동을 시작했으나, 인접 시장에서는 中間溜分, 휘발유 등의 수요에 비해 重油 수요가 적기 때문에 잉여중유가 시장을 찾아 歐美, 아시아 지역으로 흘러들어 오고 있다. 이들 제요소를 감안하면 아시아지역의 石油시장에서 중유가 더욱 과잉현상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산유국임과 동시에 LNG의 대형 수출국들은 LNG의 수출에 take or pay 방식을 채용하고 있다. 이 결과, 電力, 도시가스 업계 등 대 수요업체는 原子力에 이어 LNG를 소비 우선도가 높은 연료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아시아에서의 重油 과잉에 대한 산유국의 대응책으로 가격정책과 함께 LNG 판매정책 변화도 피할 수 없는 단계에 와 있다.

重油과잉으로 상정된 아시아의 에너지 수급 불균형은 수입국과 수출국간의 긴장을 가져온다. 잘못 대응하면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안정되고 탄력성이

있는 에너지 수급관계를 지속적으로 확보해 간다는 방향과는 반대로 에너지 무역을 더욱 정치색이 짙게 할 우려가 다분히 있다.

重油과잉 현상은 석유위기 이후의 각국의 대응책의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그 나름대로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 만큼 이러한 불균형을 시정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이대로 방치해 두면 모순이 커져, 결국 각국의 에너지 政策은 상호갈등과 왜곡에 빠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아시아 에너지 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대해 각국이 인식을 같이하고 가능한 공동노력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기본 대응 방향으로 다음의 몇가지를 고려할 수 있다.

① 각국이 石油 등 에너지의 무역자유화를 더욱 추진하고, 석유업계 뿐만 아니라, 각 에너지 산업·기업간의 제휴, 협력관계를 강화할 것,

② 석유시장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重質油 분해설비의 신증설이 필요하나, 각국별로 대응해서는 또 다른 불균형을 낳기 때문에 제휴, 분업의 길을 통해 지역전체로서의 균형 회복을 도모할 것.

③ 자원수출국과 소비국 모두 에너지원간의 최선의 수급균형을 모색할 것, 일차적으로 국가간의 콘센서스 형성이 요청되는 바이다. *

〈日本경제신문 10/11〉